기초지자체 첫 국토부 설명회주민 열기 높아 23일 요청 개최도시 재정비 추진 TF 출범도그린시티 포함 부산 5곳 경쟁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 그린시티(신시가지) 전경. 부산일보 DB정부가 5월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선도지구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전국 각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진다. 부산 해운대구도 좌동 그린시티의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국토부 설명회를 여는 등 본격 준비에 나선다.해운대구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 해운대문화회관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해운대구 요청으로 열렸다. 전국 시·도 차원이 아닌 기초지자체 차원으로는 처음 열리는 국토부 설명회다.노후계획도시는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다.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 첫 계획도시로 1997년 조성된 해운대 그린시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됐다. 부산에서는 해운대1·2지구, 화명2지구가 포함됐고 올해 나온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범위가 확대되면서 만덕·화명·금곡·덕천, 다대, 개금·엄궁·학장·주례 등 3곳이 추가돼 총 5곳이 재정비 지역에 들어갔다. 전국 단위로는 총 110곳이 대상이다.이 중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특별정비계획이 우선 수립된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중 정비사업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내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 지정 세부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고, 연내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현재까지 선도지구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진 바가 없지만, 선도지구 선정 요건으로 주민 참여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알려지면서 단지별로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여는 등 경쟁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해운대구는 지난달 1일 그린시티 재정비 추진과 반여·반송동 정책이주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도시 재정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도 했다.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해운대 그린시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도지구로 지정돼야 한다”며 “반여·반송동 재정비 또한 부산시와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해운대 전역의 도시 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